



| | | | | |
|---|--|----------------|--|---|
|  | | 보 도 자 료 | | 수도권매립지 종료 |
| | | 배포일자 | 2022년 2월 23일(수) 총 5매 |  환경특별시 인천 |
| 담당 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보장팀장 신유선 ☎440-2931 담당자 박진 ☎440-2932 | |
| 사진(이미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 참고자료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
| 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두터운 인천형 복지제도로 단 한 명의 혜택 누락도 막는다

- 완화된 ‘인천형 긴급복지’ 적용 기간 6월 말까지 추가 연장 -
- 사각지대 해소 위해 복지부 기준보다 완화된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 적극 추진 -

인천시가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단 한 명의 시민도 복지 지원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인천형 복지제도를 더욱 두텁게 운영한다.

인천광역시는 정부 기준에 부적합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오는 6월말까지 완화된 ‘인천형 긴급복지’ 기준을 추가 연장해 적용하는 한편, 걱정 소득 보장을 위한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저소득층 증가 추세에 따라, 인천시 기초수급자수는 2020년 대비 12% 증가했고, 긴급복지대상자도 13%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인천형 긴급복지’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비율 증가에 따라 인천만의 특색을 반영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지역형 복지제도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주 소득원의 실직, 질병, 사망 등 갑작스런 위기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해 위기가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총 15,580명의 시민들이 인천형 긴급복지제도 혜택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 완화된 인천형 긴급복지 기준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당초 85% 이하)
- ▷ 재산기준 : 3억5천만 원 이하 (당초 1억8천8백만 원 이하)
- ▷ 금융재산 : 1천만 원 이하

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소득감소, 실직, 폐업 등 시민들의 불안정한 생활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지금까지 적용해 온 선정기준 완화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추가 연장해 저소득층 소득 격차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지원 항목은 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0만4,900원), 의료비(1인당 300만 원 이내), 주거비(4인 가구 기준, 64만3,200원 이내) 등이다.

한편,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20년 10월 발표된 인천복지기준선에 따라 시민 누구나 적정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 시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시행한 이후 연말까지 총 153가구, 205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려면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기준 1억 3천5백만 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연 1억 원 이하 또는 재산 9억 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지원액은 월 1인 가구 291,722원, 2인 가구 489,013원, 3인 가구 629,205원, 4인 가구 768,162원이다. 정부형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의 50%에 해당되는 급여를 정액으로 지급받고, 출산 시 해산 급여 70만 원과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인천형 긴급복지’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생계곤란 시민이면 누구든지 주소지 관할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세히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인천형 복지제도를 아직까지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홈페이지, 현수막, 카드뉴스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문자,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복지제도를 통해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하는 한편, 시민의 고통을 보듬으면서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복지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 <참고> 1. 인천형 긴급복지 개요
2.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참고1

인천형 긴급복지 개요

- 지원대상 : ①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②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과 ③ 기타 사항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긴급복지」 지원 종료 시점 6개월 경과후 동일사유로 「인천형 긴급복지」 지원 가능

- 위기 사유 (위기상황 해당시 先 지원 後 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한시적 완화 소득·재산기준 ('22. 6월말까지)

○ (소득)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 100% 이하 (단위 : 원)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당초 (85% 이하) | 1,653,090 | 2,771,072 | 3,565,496 | 4,352,918 | 5,120,838 | 5,870,953 |
| 한시완화 (100% 이하)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 (재산) 1억 8,800만원 → 3억 5,000만원

○ (금융재산) 1,000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50% 반영

○ (재지원 제한) 2년 이내 → 6개월 이내 동일 사유로 재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최대지원 횟수는 긴급복지(정부형)와 동일

| 종 류 | |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 금전·현물 지원 | 위 기 상 황 주 급 여 | 생계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304천원 (4인기준) |
| | | 의료 |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이내 |
| | | 주거 |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643.2천원 이내 (4인기준) |
| | 부 가 급 여 | 교육 |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124.1천원/중 174.7천원/고 207.7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
| | | 그밖의 지원 |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06천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 |

□ 사업기간 : '21. 10~

□ 지원대상 :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 200여가구

*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긴급복지(인천형 포함)생계지원 대상자 제외

□ 선정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각 요건 충족

○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단위:원)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기준중위소득 (20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 인천형선정기준 (중위40%이하)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 (재 산)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가구, 100% 환산 자동차 보유 가구

○ (부양의무자) 고소득(연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 지원내용 : 가구 규모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정액지원)

(단위 : 원)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인천형 현금급여 | 291,722 | 489,013 | 629,205 | 768,162 | 903,678 | 1,036,051 |

○ (해산·장제급여) 출산시 70만원, 사망시 80만원